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식 자료집

-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14:00
- 장소 :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205호)

PROGRAM

□ 개요

- 행사명 :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식
- 일 시 : 2022.1.26.(수) 14:00
- 장 소 :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205호)
- 주 최 : 민주연구원
- 참석대상 :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특별포상 수상자 등(언론 공개)
- 진행방법 : 현장 진행 + 유튜브 채널 생중계(민주ON)
 - 모범상 이상 수상작 PPT 슬라이드쇼 시연
 - 손피켓, 백드롭을 활용하여 정책제안 현장 전시
 - 현장 참석 수상자(15명) ‘정책제안 1분 발표(PT)’ 후 ‘시상식’ 진행

□ 진행 순서 (60분)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진행 사회 :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			
사전 등록	~14:00	◦체온체크, QR체크인, 손소독 등	
개회	14:00~14:02	◦국민의례	2분
	14:02~14:05	◦참석자 소개	3분
	14:05~14:10	◦인사말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5분
정책 발표	14:10~14:40	◦정책제안 1분 스피치 - 현장 참석 수상자(15명)	30분 (#붙임 참조)
특별포상 시상식	14:40~15:00	◦당대표 표창장 시상 - 1급 포상 - 최우수상(상금 각 50만원) : 2명 - 2급 포상 - 우수 상(상금 각 30만원) : 8명 ◦민주연구원장 표창장 시상 - 2급 포상 - 모범상(상금 각 20만원) : 17명 - 2급 포상 - 장려상(상금 각 10만원) : 59명	20분 참석자 명단 (#붙임 참조)
폐회	15:00~	◦기념촬영	

[붙임] “정책제안 1분 발표(PT)” 주요 내용

구분	제안자	정책제안명	주요내용
최우수상	나광국	도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권역별(서해, 남해) 종합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등 의료 취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신희근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정책 개혁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를 통한 홍보 필요
우수상	정정호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해양쓰레기 수거, 소각 및 업사이클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순환자원화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최용휘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및 실질적 소상공인 도움 제공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
모범상	임병현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농작물 잔사 및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친환경 퇴비화로 지역 향상 ▲환경오염 방지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
	이수경	생애 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통합사이트 개설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 제공 등
장려상	황경석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가로 대체하여 일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중지시 활용 가능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장 부담 경감
	서지연	한국형 암 애프터케어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직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모범상	김우성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양형여사 포털’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통합 플랫폼 ▲17개 시도 예산 집행 실시간 확인 및 낭비사례 신고 등 소통 공간 마련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국민불신 해소
	김현욱	옛장수 마음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드 처방 필요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적개입 제도화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일부 입주자 대표회의 갑질 사전 차단,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모범상	김성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폰 후면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 장치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경찰로 위급 문자 및 위치 전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보이스피싱 등 예방
	최정규	355만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비전 공약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으로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제공·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해 R&D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
장려상	정재현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대학생 식당 알바가 교부반은 지자체의 보건증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청년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배향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대전환적 교육정책안	▲초등학교 담임을 1년이 아닌 2년 담임, 부담임제를 적용하여 업무 및 학생관리 효율화 ▲중고의 경우 담임 등 교실에 상주하여 상담 및 학생관리 ▲학교폭력예방 교과목을 이론과 현장실습 과목으로 확대 개편
장려상	황효빈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	▲생리대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소득별 가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원

※ 특별포상 대상자 전체 명단은 부록 참조

CONTENTS

|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식 프로그램 |

1.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추진 개요	01
2.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1차 전문가심사 결과	03
3.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2차 국민심사(최종심사) 결과	09
4. 우수작(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 정책제안 전문	11
[부록]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특별포상 대상자 명단	62

□ 목적

-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대선후보와 직접 토론·소통하는 장 마련
- 민주당과 대선후보는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고 정책대결과 정책선거를 주도하는 중심 역할 수행

□ 개요

- 시 기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말
- 행사명 :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슬로건 : 국민의 제안, 내 삶을 바꿉니다!
- 주 최 : 민주연구원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분야 및 주제	· 분야 제한 없음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의제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포괄
제안내용	· 거시적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제안기간	· 2021.12.25.(토) ~ 2022.01.10.(월) 낮 12시까지 (16일간)
제안방법	·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icp.theminjoo.kr)에서 텍스트 또는 동영상으로 제안 · 텍스트 : 구글폼 신청(https://bit.ly/3sbmByr) · 동영상 : 구글폼 신청(https://bit.ly/3oTNOyQ) + 4분 이내 동영상
1차 전문가심사	· 기간 : 2022.1.11.(화)~13.(목) · 기준 : 제안내용(90점), 참신성(10점) 평가(전문가 5인 점수 합산 평균)
입선작 발표	· 발표일 : 2022.1.14.(금)
2차 국민심사	· 투표기간 : 2022.1.14.(금)~20.(목), 낮 12시까지 · 투표페이지(http://icpfestival.theminjoo.kr)에서 누구나 1인당 3건 온라인 투표
우수작 발표	· 발표일 : 2022.1.20.(목)

구분	주요 내용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선대위 사정으로 취소
시상식	· 일시 : 2022.1.26.(수) 14:00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당대표 포상 - 최우수상(명)(각 50만원), 우수상(00명)(각 30만원) · 민주연구원장 포상 - 모범상(00명)(각 20만원), 장려상(00명)(각 10만원)

□ 정책제안 심사 및 포상 절차

○ 추진절차

- 누구나 정책제안(텍스트 또는 동영상) → 1차 민주연구원 전문가심사 → 입선작(장려상 이상 당선작) 선정 → 우수 정책제안(상위 00건) 홈페이지 업로드 → 2차 국민심사(온라인 투표)를 통한 개방형 평가 → 모범상 이상 우수작 선정 →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선대위 사정으로 취소) → 시상식(당대표 및 민주연구원장 표창)

○ 1차 내부 전문가심사

- 평가방식 : 민주연구원 전문가 5인 평가(5인 점수 합산 평균)
- 평가기준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입선작(당선작) 선정(00건)
- 평가내용(100점 만점) : 제안내용 90점 + 창의성(참신성) 10점
- 제안내용(90점) : 제안 배경 10점, 제안 내용 40점, 기대효과·활용방안 40점

○ 2차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 평가대상 : 1차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평가점수 상위 우수 정책제안(00건)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평가방식 : 투표페이지에서 국민 정책제안서 확인 후, 1인당 3건 온라인 투표
- 평가기준 : 온라인 투표 결과 다득표 순으로 모범상 이상 우수작 선정

○ 입선작 이상 수상작 특별포상(※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1조)

- 당대표 표창 : 최우수상 0명, 우수상 00명
- 민주연구원장 표창 : 모범상 00명, 장려상 00명

□ 정책제안 접수 결과

○ 접수 및 심사 절차

- 정책제안 접수 → 민주연구원 1차 전문가심사 → 평가점수 고득점 순 상위 **71.80점 이상** 입선작 선정(**98건, 90명**) → 상위 **76.20 이상** 입선작 **32건(29명)**에 대한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한 개방형 평가

○ 접수 현황(단위 : 건) : 총 372건

구분	텍스트	동영상	합계	비고
제안 건수	369	3	372	
제안 인원	288	3	291	동일인 복수 제출

구분	텍스트	동영상	합계	비율(%)
경제·산업·고용	91	2	93	25.0
사회·교육·행정	171	1	172	46.3
국토·자원·환경	61		61	16.4
정치·외교·통일·안보	44		44	11.8
기타	2		2	0.5
합계	369	3	372	100

□ 1차 전문가심사 결과 : 입선작 선정

- 평가방식 : 민주연구원 전문가 5인 평가(5인 점수 합산 평균)
- 평가기준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상위 입선작 선정
- 평가내용(100점 만점) : 제안내용 90점 + 창의성(참신성) 10점
 - 제안내용(90점) : 제안배경 10점, 제안내용 40점, 기대효과·활용방안 40점
- 심사결과 : 상위 76.20 이상 입선작(**32건, 29명**)과 상위 71.80점 이상 입선작(**66건, 61명**) 구간으로 나눠 입선작 선정(**총 98건, 90명**)

구분	텍스트	동영상	합계	비고
상위 01~32위 입선작	32건(29명)		32건(29명)	- 평가점수 76.20점 이상 - 2차 국민투표 대상
상위 33~98위 입선작	65건(60명)	1건(1명)	66건(61명)	- 평가점수 71.80점 이상 - 61명 장려상 수상 확정
합계	97건(89명)	1건(1명)	98건(90명)	- 동일인 복수제출

※ 정책제안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icpfestival.theminjoo.kr/vote_result.php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상 대상자 **61명(66건)** 중 실제 수상자는 **59명(64건)**임(#부록 참고)

○ 상위 1위~32위 입선작(당선작) 목록 및 주요 내용(※접수번호 순)

접수 번호	정책제안명	주요 내용
3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가로 대체하여 일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중지시 활용 가능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장 부담 경감
5	한국형 암애프터케어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직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19	국민정신건강 전담 정책	▲전국민 정신과 주치의 지정, 중독관련 약물치료 등 연계 치료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사회 구현
28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특성화고 취업을 홍보 폐지 ▲취업을 실제에 따른 선생님의 부담감소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정확한 정보전달로 양질의 취업처 추천 가능
36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개선방법 모색→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39	'부모' 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보장으로 출산을 제고와 함께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출산휴가를 현행 10일(5일 유급)을 20~30일(유급 20일 이상)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66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학교내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등 실시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 ▲현장 실습교육 비중을 높이고 학생수준에 맞춰워 실습시간과 범위조절, 지역 중소기업과 소성공인 등 지역내 산업과 연계
75	장애인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급을 현행 고용기업에 전액지원하는 것을 고용기업과 장애인 동률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처우 개선
104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제2의 개성공단)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단 조성 ▲강원북부, 경기북부에 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경제적 통일기반 마련
107	민간사업자 주택개발사업의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공유지 비율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적용률 도입. 국·공유지 비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주택 지자체·공공사업자 인수 조문 신설 ▲공공주택 공급면적 비율에 준하여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108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구 내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제한	▲주택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재건축·재정비 구역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신규 공공주택 공급용으로 활용 ▲무주택 임차인의 등지 내몰림 현상 방지
109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가칭 청년주택리츠) 운용방안 제한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랫폼 제공 ▲민간 매각부지를 재정(기금)과 청년의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

접수번호	정책제안명	주요 내용
110	착한 임대인 종부세 감면제도	▲착한 임대인(임대료를 적정가 이하로 공급하는자)에게 종부세율 일정부분 감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 완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주거 안정성 확보 등
121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공약	▲법 제정 및 중앙회 설립 ▲지역관광협동조합 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한국관광 증가 대비 선제적 대응, 지역의 경기활성화 기여
122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대학생 식당 알바가 교부받는 지자체의 보건증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청년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131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및 실질적 소상공인 도움 제공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
136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압행이사 포털"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통합 플랫폼 ▲17개 시도 예산 집행 실시간 확인 및 낭비사례 신고 등 소통 공간 마련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국민불신 해소
138	메타버스의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장애인, 노인,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164	355만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비전 공약'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으로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제공·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해 R&D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
171	옛장수 마음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드 처방 필요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격개입 제도화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사전 차단,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174	K-Jewelry 한류상품화	▲주얼리를 관리할수 있는 모법 제정을 통해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주얼리의 유통관리,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수입 대체
181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정책 개혁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를 통한 홍보 필요
183	초·중 새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새학년에 각종 성격분석검사(MBTI, TCI)기질검사, 애니어그램 등)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교육과정 의무화 도입 ▲즐거운 학교생활로 학년을 시작하여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및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205	동일 분야 동일 NCS	▲같은 분야 공공기관 NCS과목 통일 ▲청년들의 구직기간 단축, 효율적 취업 준비 등 청년의 부담 해소
207	생활소음 갈등해결(중간소음 포함)	▲소음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소음 발생업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방음시설여부 등 허가를 취득하도록 개정 ▲생활소음센터 운영 등
245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폰 후면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 장치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경찰로 위급 문자 및 위치 전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보이스피싱 등 예방
247	도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권역별(서해, 남해) 종합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 발생시 기능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254	당뇨 환자 관리	▲당뇨관리 정부부처 신설을 통해 환자들의 당뇨 소모품 자가 구입, 정기적 의사상담을 통한 관리 등 ▲당뇨로 인한 장애나 생명위협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관리 필요
248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원화된 장애인지원센터를 복지로 홈페이지 일원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부활동 보장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자립 기여

접수번호	정책제안명	주요 내용
308	생애 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통합사이트 개설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 제공 등
319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농작물 잔사 및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친환경 퇴비화로 지역 향상 ▲환경오염 방지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
362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해양쓰레기 수거, 소각 및 업사이클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순환자원화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 정책제안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idpfestival.theminjoo.kr/vote_result.php

○ 상위 33위~ 98위 입선작(당선작) 목록 (※접수번호 순)

접수번호	제안자	제안명	제안분야	비고
1	양동선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국민을 위한 농업,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국토·자원·환경	
6	강재구	소확행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젝트 - '움직이면 행복합니다'	사회·교육·행정	
9	최용식	우린 너를 잊지 않았다 - 청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사회·교육·행정	
15	정윤서	청소년층의 혜택 확충 및 개선	사회·교육·행정	
16	조영만	동물건강복지보험 제도 시행(안)	사회·교육·행정	
31	조병성	아스콘 공장과 주변 지역주민 상생 발전 제안	국토·자원·환경	
33	김수래	청년체육인 일자리창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경제·산업·고용	
35	김수래	국가 공공기관(행정기관) 명칭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장외·교통·안전·보	
51	박상운	사회 대전환 정책	사회·교육·행정	
58	한숙경	지방 경쟁력 청년일자리 안정화	경제·산업·고용	
59	박상인	동물보건소 설립	사회·교육·행정	
60	박종주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교육·행정	
63	김가진	저소득층 청소년 국가적 법률지원 시스템	사회·교육·행정	
65	임승주	One-stop 노동법원	경제·산업·고용	
67	임승주	공정노동위원회 신설 제안(노동법원의 신설에 따른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경제·산업·고용	
73	주미옥	재벌, 대기업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최저가 입찰제 폐지, 하도급법 개정	경제·산업·고용	
74	이원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관리 문제점 제안	사회·교육·행정	
76	정재현	국민을 보듬습니다 - 화물전용 지하주차장 건립!	국토·자원·환경	
79	정재현	문화바우처 확대로 학생 문화생활 향상	사회·교육·행정	
89	김성근	국립대학 강의 의무 온라인 중계법	사회·교육·행정	
90	홍승호	모세의 기적을 위한 유도선	국토·자원·환경	
96	류창환	기업 친화적 근로기준법 개선	국토·자원·환경	
103	조성현	한국어와 공용어인 "한국수어"의 의무교육	사회·교육·행정	
106	안기헌	주택대출	사회·교육·행정	

접수 번호	제안자	제안명	제안분야	비고
124	박계연	마을 전기차 충전소	국토·자원·환경	
132	장준영	서울가꿈주택사업 개선 및 확대시행 제안	사회·교육·행정	
134	최정호	완성품에 중소기업부품의 비율에 따른 혜택	경제·산업·고용	
150	김영수	원자력 안전문화 확립	사회·교육·행정	
151	김명수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 문제 해결 공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토·자원·환경	
158	오창균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깔창 보급사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회·교육·행정	
169	김동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정치외교통일안보	
175	추병수	아파트 분양 정책	국토·자원·환경	
185	나영준	국가보훈처 차별 개선의 핀셋 공약	사회·교육·행정	
187	조종걸	국가 주도관리 국민 영원심터 조성사업	사회·교육·행정	
193	박형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토·자원·환경	
217	박한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공모사업 점수 입찰제도	사회·교육·행정	
219	willow125	교사선발제	사회·교육·행정	익명
231	조종걸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	사회·교육·행정	
237	유민철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해소 정책	경제·산업·고용	
239	최승열	ESG 시대 사회책임자 일자리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재활용에서의 생산자 책임성	국토·자원·환경	
244	박중규	간판을 공유합시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 방안	경제·산업·고용	
246	유명옥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 감염(해외유입)차단 관리시스템	사회·교육·행정	
249	나광국	잉여 농산물 시장 격리 방식 개선(과잉 생산 농산물 활용 주산지 식품 산업 육성)	국토·자원·환경	
250	송만영	미래 자동차 산업재편	경제·산업·고용	
285	육승용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교육·행정	
298	조연우	플랫폼 택시 및 일반 택시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권 보장	사회·교육·행정	
300	김혜은	대한민국 공교육 바로잡기 프로젝트	사회·교육·행정	
304	박동원	대리운전 공공앱 플랫폼 사업	경제·산업·고용	
309	인태원	조세납부 공정화를 통한 공정사회 건설	경제·산업·고용	
317	이순자	부모의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및 급여지급	사회·교육·행정	
318	황효빈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	사회·교육·행정	
323	박성진	가칭 소방안전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의 건!	사회·교육·행정	
332	정다혜	돌봄울타리로 만족 up, 안전 up, 세대 통합 up!	사회·교육·행정	
335	오광영	노인공원 조성(가칭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회·교육·행정	
342	최성룡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조건 확대 개편	사회·교육·행정	
351	지도영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방안	사회·교육·행정	
353	권영록	민사집행법개정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정보삭제	경제·산업·고용	
361	박정우	예술계 종사자 직업인 인증 시스템	경제·산업·고용	

접수 번호	제안자	제안명	제안분야	비고
372	김종덕	가족이 행복한 월세 세액공제	경제·산업·고용	
373	조연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사회·교육·행정	
376	문찬우	'디지털 포용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디지털역량 교육권'을 보장하자	사회·교육·행정	
378	배향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대전환적 교육정책안	사회·교육·행정	
381	조광순	국가 인프라 구축 효율화와 귀촌 활성화	국토·자원·환경	
384	윤구현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지원 기반 마련	정치외교통일안보	
385	김성열	택시환승제	국토·자원·환경	
388	류태림	두피 스케일링 비용 평생 2회 건강보험급여 적용	사회·교육·행정	

※ 정책제안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idpfestival.theminjoo.kr/vote_result.php

국민 정책제안 2차 국민심사(최종심사) 결과

○ 2차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결과

- 평가대상 : 1차 전문가심사 결과 상위 76.20점 이상 입선자 32건(29명)
- 평가방식 : 투표페이지에서 국민제안서 확인 후 누구나 1인당 3건 온라인 투표
- 평가기준 : 투표 결과 다득표 순으로 우수작(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 선정
- 투표결과 : 총 4,412명 투표, 13,323건 투표(1인 3건 투표)
- 심사결과 : 최우수상(2명), 우수상(8명), 모범상(19명) 등 총 29명(32건) 우수작 선정

	총 투표자수	총 투표수	비고
계	4,412	13,323	1인 3건 투표

○ 우수작(“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 선정 현황

구분	수상 대상자	실제 수상자	비고
최우수상	2명(2건)	2명(2건)	국민투표 1~2위
우수상	8명(8건)	8명(8건)	국민투표 3~10위
모범상	19명(22건)	17명(18건)	국민투표 11위~32위
합계	29명(32건)	27명(28건)	동일인 복수 제출

※ 정책제안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idpfestival.theminjoo.kr/vote_result.php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우수작 수상 대상자 29명(32건) 중 실제 수상자는 27명(28건), 장려상 수상 대상자 61명(66건) 중 실제 수상자는 59명(64건)임(#부록 참고)

○ 우수작(“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 목록

구분	제안자	정책제안명	제안분야	득표수
최우수상	나광국	도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사회교육행정	1,331
	신희근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사회교육행정	1,097
우수상	정정호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국토자원환경	798
	최용혜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제산업고용	773
	임병현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국토자원환경	701
	이수경	생애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사회교육행정	532
	황경석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사회교육행정	527
	임승주	'부모' 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사회교육행정	526

구분	제안자	정책제안명	제안분야	득표수
	서지연	한국형 애플프티케어	사회교육행정	525
	서정화	당뇨 환자 관리	사회교육행정	513
	김지현	생활소음 갈등해결 (층간소음 포함)	경제산업고용	468
	김종목	K-Jewelry 한류상품화	경제산업고용	438
	한숙경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사회교육행정	437
	김우성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_ "국민 암행어사 포털"	사회교육행정	427
	문종진	국민 정신건강 전담 정책	사회교육행정	383
	김용선	착한 임대인 중부세 감면제도	경제산업고용	370
	김현옥	"옛장수 마음대로 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드 처방 필요!"	경제산업고용	342
	오현숙	장애인고용지원금	사회교육행정	337
모범상	작은실천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이하 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가칭 청년주택리스) 운용 방안 제안	국토자원환경	316
	김성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사회교육행정	310
	오희주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사회교육행정	300
	mjh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사회교육행정	280
	김상록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제2의 개성공단)	정치외교안보	243
	김성광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	경제산업고용	207
	작은실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제한	국토자원환경	206
	양미아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행정	174
	작은실천	민간사업자 주택개발사업의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국토자원환경	157
	양미아	초중 새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사회교육행정	146
	최정규	355만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 비전 공약'	경제산업고용	118
	정재현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사회교육행정	106
	최석기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공약	경제산업고용	77
	박주원	동일 분야 동일 NCS	경제산업고용	71

※ 수상작 정책제안 내용 자세히 보기 ▶ [2차 국민심사 결과 및 수상 내역 발표]

http://idpfestival.theminjoo.kr/vote_result.php

□ 우수작 목록 및 주요 내용(32건, 29명)

구분	제안자	제안명	주요내용
최우수상 (2명)	나광국	도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권역별(서해, 남해) 종합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신희근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정책 개혁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를 통한 홍보 필요
	정정호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해양쓰레기 수거, 소각 및 업사이클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순환자원화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우수상 (8명)	최용휘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및 실질적 소상공인 도움 제공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
	임병현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농작물 잔사 및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친환경 퇴비화로 지역 향상 ▲환경오염 방지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
	이수경	생애 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통합사이트 개설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 제공 등
	황경석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가로 대체하여 일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중지 시 활용 가능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장 부담 경감
	임승주	‘부모’ 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보장으로 출산율 제고와 함께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출산휴가를 현행 10일(5일 유급)을 20~30일(유급 19일 이상)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서지연	한국형 암 애프터케어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식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서정화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원화된 장애인지원센터를 복지로 홈페이지 일원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부활동 보장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자립 기여
	김지현	생활소음 갈등해결 (충간소음 포함)	▲소음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소음 발생업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방문시설여부 등 허가를 취득하도록 개정 ▲생활소음센터 운영 등
	김중목	K-Jewelry 한류상품화	▲주얼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법 제정을 통해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주얼리의 유통 관리,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수입 대체
한숙경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학교내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등 실시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 ▲현장실습교육 비중을 높이고 학생수준에 맞	

모범상 19명 (22건)	김우성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안행행사 포털”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통합 플랫폼 ▲17개 시도 예산 집행 실시간 확인 및 낭비사태 신고 등 소통 공간 마련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국민불신 해소
	문종진	국민정신건강 전담 정책	▲전국민 정신과 주치의 지정, 중독관련 약물치료 등 연계 치료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사회 구현
	김용선	착한 임대인 증부세 감면제도	▲착한 임대인(임대료를 적정가 이하로 공급하는자)에게 증부세를 일정부분 감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 완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주거 안정성 확보 등
	김현옥	옛장수 마을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드 처방 필요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적개입 제도화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 사전 차단,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오현숙	장애인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급을 현행 고용기업에 전액지원하는 것을 고용기업과 장애인 통틀어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처우 개선
	작은살천(의명)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 (가칭 청년주택리스) 운용방안 제언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랫폼 제공 ▲민간 매각부지를 재정(기금)과 청년의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
	김성수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폰 후면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 장치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경찰로 위급 문자 및 위치 전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보이스피싱 등 예방
	오희주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특성화고 취업을 홍보 폐지 ▲취업을 실적에 따른 선생님의 부담감소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정확한 정보전달로 양질의 취업처 추천 가능
	mjh(의명)	당뇨 환자 관리	▲당뇨관리 정부부처 신설을 통해 환자들의 당뇨 소모품자가 구입, 정기적 의사상담을 통한 관리 등 ▲당뇨로 인한 장애나 생명위협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 관리 필요
	김상록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 (제1의 개성공단)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단 조성
	김성광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장애인, 노인,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장애인, 노인,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급	
양미아	초·중 새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새학년에 각종 성격분석검사(MBTI, TCI)기질검사, 애니어그램 등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교육과정 의무화 도입 ▲즐거움 학교생활로 학년을 시작하여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및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최정규	355만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비전 공약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으로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제공·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해 R&D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
정재현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대학생 식당 알바가 교부받는 지자체의 보건증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청년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최석기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공약	▲법 제정 및 중앙회 설립 ▲지역관광협동조합 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한국관광 증가 대비 선제적 대응, 지역의 경기활성화 기여
박주원	동일 분야 동일 NCS	▲같은 분야 공공기관 NCS과목 통일 ▲청년들의 구직기간 단축, 효율적 취업준비 등 청년의 부담 해소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우수작 수상 대상자 29명(32건) 중 실제 수상자는 27명(28건)임(#부록 참고)

□ 최우수상(2건, 2명)

○ 최우수상 ①

제안자	나광국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도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① 제안배경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모든 국민은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② 제안내용	<p>도서 지역 주민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 지역은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함. 2021년 기준, 전국 유인도 465개 중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435개로 대한민국 섬 전체의 93.5%를 차지함. 2. 섬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196.08로 전국 평균 129.0을 크게 넘어서며, 병의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29개로 전국 평균 0.92개의 1/3수준임. 3. 전남, 충남, 경남 등에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선(총5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보다는 예방 관리 수준의 진찰 정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진료과목도 아주 제한적이고 전문 의료 인력도 전무한 상황. 4.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 편의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안 절실. 5. 각 섬마다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재난 및 감염병 사태 등에도 활용 가능한 10,000t 급 종합병원선을 권역별로 건조 운영 필요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권역별 종합병원선 건조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중·러 등 군용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서해 남해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10,000t급 종합병원선을 운영. -미국 7만t급 2척, 중국 2만t급, 러시아 1.2만t급 군용 병원선 운용 2. 병원이 없는 섬이나 해안 또는 해상에서 응급 의료수요 발생 시 인명구호로 국민의 생명보호 3. 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해결로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취약지역 주민 의료복지 실현 4. 재난,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 최우수상 ②

제안자	신희근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① 제안배경	<p>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건국 이후 인구 감소는 수년 간 예상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 시점이 더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p> <p>이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어섰습니다. 머지않아 역삼각형 인구분포 구조로 장기적 경기침체와 사회적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늘어가게 되고 실패한 일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출산 및 다자녀 정책을 통 크게 뜯어고쳐 국가비전을 제시하면 어떨까요~</p>		
② 제안내용	<p>지금의 정책은 지자체에서 약간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동수당은 7세까지 10 만원으로 (유럽은 16~18세까지이고 지급금액도 큼) 미미하고, 다자녀 대학 장학금은 부모 소득으로 구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또 성적기준 충족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형제자매가 3명이상으로 한정(둘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정책입니다.</p> <p>다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소득분위와 성적구분으로 정하여 지급하지 말고 다자녀 둘째부터는 전액 장학금 지급하여 가난하고 성적 좋은 자녀들만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p> <p>'아이를 낳으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는 슬로건으로 후보님의 공약을 포함하여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로 작성하여 누구나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후보님의 대선공약으로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드립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출산부터 보육, 대학, 졸업까지 부모의 개인능력으로 책임지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들의 힘듦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시키고 대학 진학을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며 인생을 받쳤습니다. 점차 하나만 남아 잘 키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 혼자 잘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 생존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비혼율이 늘어나 출산율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이 최하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녀가 만나 두 명의 자녀를 뒀어 인구의 크기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p> <p>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출산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 복지가 완성되고 출산과 자녀 부양을 위한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님의 정책 공약으로 제안합니다.</p>		

□ 우수상(8건 / 8명)

○ 우수상 ①

제안자	정정호	제안분야	국토·자원·환경
제안명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① 제안배경	<p>①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 사고 - 바다에 버려진 각종 페어구, 페어망 등은 선박 추진기관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등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함</p> <p>② 어망에 쓰레기까지 걸려 올라와 어업생산성 감소 - 어망에 어획물만이 아닌 쓰레기까지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조업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어망이 망가지고, 어획량이 줄어들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p> <p>③ 페어구에 잡힌 소위 유령어업으로 인한 바다생태계 파괴 -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의도하지 않았던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호해야할 해양포유동물 10만 마리가 해양쓰레기에 걸려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해양쓰레기가 바다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이 먹물 먹지 않아 서서히 죽게 됨</p> <p>④ 해양 쓰레기가 해안이나, 얕은 바다에 쌓여 생물서식지를 파괴</p> <p>⑤ 바람과 해류를 타고 국가 간 갈등을 유발 -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 중 가벼워서 잘 뜨는 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인한 피해지역 민원이 국가 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함.</p> <p>⑥ 바다 경관이 망가져 관광자원의 질 하락 - 해양쓰레기의 70%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바, 강 상류는 1급수이나 점차 수질이 악화되어 마지막 하류나 하구연 부근은 3급수 이하까지 떨어지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등 하천 쓰레기도 모두 하구연에 쌓이게 됨</p> <p>⑦ 수거/처리비용이 육상에 비해 해상이 과다함 -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려면 육지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하고, 처리에 앞서 쓰레기가 달라붙은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짠 바닷물 등도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어려움이 있음</p>		
② 제안내용	<p>①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건조 및 운행</p> <p>○ 바다에서 직접 해양쓰레기를 수거 후 바로 자원화가 가능한 선박을 건조하여 연</p>		

<p>안을 비롯해 멀리 태평양 쓰레기섬까지 진출해 전 세계 해양쓰레기를 순환자원화하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은 국비를 통해 연구개발 및 발주를 진행하고, 태평양까지 진출하는 선박은 비정부기구를 통해 유엔환경계획의 도움을 받아 연구개발 및 운영까지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 o 업사이클선박은 <수거→선별→파쇄→세척 및 건조→분쇄→화학공정→압축성형→냉각>을 통해 건축자재 (외/내장재) 등을 만들거나, <수거→선별→파쇄→세척 및 건조→분쇄→화학공정>을 통해 선박운영용 연료로 업사이클링 <p>② 지속가능한 바다와 관련한 국제기구 신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국제적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와 평가 및 모니터링이 없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는데 있어 장벽이 되고 있음 o 해양쓰레기 영향의 계량화,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현존량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현존량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 및 대책기구 신설이 필요함 o 유엔 환경기금 및 정부산하 환경단체 기금으로 연구기관 건립 추진 <p>③ 조업중 인양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보상금 2배 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을 시행하며 조업 중 그물에 걸린 페어구와 페로프 등을 수거해 오면 현금을 지급(40리터 당 4,000원 상당) <p>④ 페어구 실명제 실효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페어구에 전자태그 (RFID)를 부착해 설치한 사람 및 업체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어업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만원 상당의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p>⑤ 깨끗한 바다를 위한 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등 유역 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행 협의체도 구성 <p>⑥ 해양환경관리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법은 체계적인 개편작업 없이 대중적이고 임시적인 법률
--

<p>개정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특히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해양쓰레기 연구에 관한 근거 조항과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 신설이 필요 <p>⑦ 각 지자체에 쓰레기 해양유입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양유입 방지시설 설치하고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유입 차단시설 설치, 집하시설, 수거장비 개선 등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p>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p> <p>①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운영으로 해양에서 곧바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소각 및 업사이클로 예산절감 효과와 순환자원화 할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사고율 감소, 선박의 엔진 및 추진체 파손 감소 - 수거, 운반, 소각, 매립, 인력 등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의 대폭 절감 - 업사이클로 인한 재활용률이 높아짐 - 재생에너지와 업사이클링 활용 :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플라스틱과 페어구류는 탄소성분, 휘발분, 가연분의 함량이 평균적으로 70~80% 이상이고, 발열량은 평균 7,000~8,000kcal/kg 이상으로 재생에너지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p>② 페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로 인한 생태계 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 복원, 어획량 증가, 관광자원 복원 및 활성화 - 어구에 사용하는 낚으로 인해 수중 백화현상으로 수중생물 서식지 및 산란환경 파괴 및 수온 상승 억제 <p>③ 지속가능한 바다와 관련한 국제기구 신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로 인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종 연구기관, 대책기구, 업사이클 클러스터단지 신설로 인해 인재육성과 많은 인력 창출이 예상됨 <p>④ 페어구 수거 보상금 증액 및 어구 실명제 제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보상금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수거율을 높이고, 어구 실명제를 통해 해양쓰레기 처리 책임제를 부여

○ 우수상 ②

제안자	최용혜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제안명	소상공인 지원정책		
① 제안배경	<p>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는 지원예산이 지금까지는 보편적 지원정책에 집중되었다면, 향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차별화된 성장형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p> <p>소상공인 개개인이 정부의 지원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편성함으로써 정부지원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p>		
② 제안내용	<p>① 소상공인 창업을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창업의 형태를 생계형 창업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리하여, 생계형 창업자는 창업과 동시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창업자의 능력을 키우고, 기술형 창업자는 창업이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과 경영 및 자금을 지원</p> <p>②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 업체별 성장단계를 생애주기별로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장단계, 안정단계로 구분하여 소상공인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p> <p>③ 소상공인 O2O 플랫폼 구축 대기업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구축과 배달사업으로 오프라인 상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매장을 온라인 매장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소상공인이 O2O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p> <p>④ 소상공인별 컨설턴트 담당제 운영 소상공인 사업이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컨설팅을 일정기간 동안(3개월)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종별, 부문별로 소상공인- 컨설턴트 매칭으로 소상공인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담당제 운영</p> <p>⑤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와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주변 상권의 상점가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전통시장을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패션의류, 먹거리 등 테마별로 구성하여 시장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시장체험과 문화 관광자원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육성</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① 소상공인 창업을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생계형 창업자에게는 사업의 안정과 기술형 창업자에게는 조기 창업성공으로 기대안정에 기여</p> <p>②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p>		

<p>소상공인 사업을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장단계, 안정단계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에게 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산 절감효과</p> <p>③ 소상공인 O2O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사업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에 기여</p> <p>④ 소상공인별 컨설턴트 담당제 운영 업종별, 부문별로 소상공인- 컨설턴트 매칭하여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여 사업 안정에 기여</p> <p>⑤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와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권역별 상권을 테마별로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시장체험이 가능하며,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p>
--

○ 우수상 ③

제안자	임병현	제안분야	국토·자원·환경
제안명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①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잔사 및 농자재 폐기물 등의 처리 방법이 없어서 방치됨 ● 다음 작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 ● 임의소각(불법)으로 처리하다가 인근 영농시설, 야산 등으로 불이 번져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 임의 소각 시 신고되면 과태료 부과, 인명 및 재산피해 유발 시 벌금 및 형사처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트레스 과중 ● 대정부 불만 폭증 		
② 제안내용	<p>(지자체를 통해) 농산물 잔사를 파쇄하여 퇴비 처리 가능하도록 만들어 줌. 기타 영농부산물(퇴비화가 불가능한 각종 농자재 쓰레기) 수거 및 폐기</p> <p>운영 방법 : 인력 운영은 공공근로를 활용 주로 겨울철 기간에 처리팀을 구성하여 파쇄팀, 수거팀으로 운영</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퇴비화로 지력 향상(파쇄 잔사를 이용) ● 환경오염 방지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잔재물 발생) ● 일자리 창출 (농한기 유희인력 활용) ● 농가 일손 돕기 (농촌 일손 부족 지원 효과) ● 농민의 불법 행위 예방 (폐기물처리법 강화로 임의소각 및 폐기가 금지되어서 다수 농가가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 ● 홍보영상 제작 활용 (후보가 출연한 홍보 영상을 제작 >> 방송등 활용 >> 후보의 대농민 이미지 제고 및 농민의 적극적 호응 유도) 		

○ 우수상 ④

제안자	이수경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생애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① 제안배경	<p>각종 복지 정책이 많고, 혜택도 많은데 잘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p> <p>쉬운 안내와 절차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그걸 시행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② 제안내용	<p>가칭 '생애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학업, 취업, 창업, 결혼, 출산, 노후, 사망'에 따라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정부의 모든 부서와 국민이 속한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한눈에 드러나게 만듭니다.</p> <p>그리고 해당 복지정책을 클릭하면 주관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회원가입은 통합사이트 한군데만 하면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통합 사이트에는 모든 국민이 복지계좌를 1개 연결시킬 수 있고, 나라로부터 통합복지카드 1개를 발급받습니다.</p> <p>그리고 각종 지원금(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포함)을 연결된 복지계좌나 복지카드의 포인트를 통해 받게 합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르고 지나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못받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각종 서류 제출, 별도의 사이트 회원가입 등)를 간편하게 만들어 국민이 신속하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비용(돈,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정책 홍보를 위한 비용,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등의 인건비) 4. 복지 정책의 투명화로 각종 조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 감소 		

○ 우수상 ⑤

제안자	환경석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① 제안배경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남성들은 일자리를 오랜 기간 동안에 비우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 그리고 본인들도 선택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인 그러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② 제안내용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달 ~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본인이나 회사에서도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육아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면 하루하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필요한 시간은 1달은 그리고 1년을 사용하는것일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이 끝나는 연령이 점점 상향되고 있고 그 안에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집으로 이동이나 아이가 감기나 환절기 질환에 걸렸을 경우 병원에 치료후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p> <p>한 달 내내 있는 일이 아니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앞 뒤로 하루 이틀 정도의 휴가만 있어도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아이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매일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오전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하루라는 시간동안에 아이와 같이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p> <p>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용을 원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일정한 일수의 가정·보육 일을 부과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듯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맞벌이 부부의 지금 같은 코로나시기에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을 때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남편의 육아시간을 늘려 여성의 일자리 스트레스 나아가 경력단절 예방과 그리고 여성의 가정 일에 대한 부담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p> <p>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보다는 육아휴가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정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을 모든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다. 2. 필요시 사용할 수 있어서 주변 같이 일하는 회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장기간 자리 비움) 3. 남성의 육아참여가 높아져서 가정이 더 화목해 진다. 		

○ 우수상 ⑥

제안자	임승주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부모' 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보장		
① 제안배경	<p>자녀의 육아는 아빠와 엄마 모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의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 및 정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p> <p>이는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선택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자녀육아의 기회를 빼앗는 차별임</p>		
② 제안내용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육아는 아빠와 엄마 모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의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 및 정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선택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의 자녀육아의 기회를 빼앗는 차별임. -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출산을 재고와 함께 남녀가 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p>■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출산휴가(현행 10일. 이중 5일은 유급)기간을 20일~30일(유급 20일 이상)로 증대해야 함 ▷ 평균적으로 자연분만을 하는 여성은 12시간 이상의 진통 및 3일의 병원입원기간이 필요하며,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여성은 5일 이상의 병원입원기간이 필요함. 또한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산모의 나이로 인하여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단기기간이라, 산모의 돌봄을 위하여 산후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태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하고 있으므로, 현행 출산휴가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둘째, '초등 1학년 휴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의 입학시, 약 1달간은 학교적응기간을 이유로 12시 이전에 귀가하게 됨. 따라서 전일돌봄이 가능했던 유치원보다 더 이른 시간에 귀가하게 됨으로서 육아의 공백이 발생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부모가 각각 1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차례로 사용할 수 있는 '1학년 휴가제'를 도입. 		

- 셋째, 공공보육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전용'교실 확충이 필요함.

▷ 현재 많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이 낮에는 일반 수업이 진행되고, 방과후에는 돌봄교실로 활용되는 '겸용'교실이 많음. 이는 해당 학급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긴 시간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돌봄교실은 1,2학년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녁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바닥난방 등이 가능한 돌봄'전용'교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 '우리동네 공부방' 마련 : 각 동에 설치된 주민센터의 문화강좌공간 등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위한 일시보육센터로 활용. 해당 공부방의 관리는 각 동의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청년일자리 증대 및 동네 언니, 형의 멘토 효과를 낼 수 있음.

- 넷째, '자녀반차'제도 신설

▷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와 관련된 병원방문, 간호, 학교방문 등을 위하여 기존의 법정연차일수 외의 연 10회의 '자녀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 다섯째,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 현행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액도 월 150~70만원으로 되어 있고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70만원 평상시 급여수준과 차이가 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으로 인하여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용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함.

▷ 육아휴직수당을 현실화하고, 상한액도 인상하여 육아휴직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줄어들도록 해야만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섯째, 육아휴직 중 퇴직금 지원

▷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임무가 뒷받침 되어주어야 함. 사실상 국가의 사회보장임무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사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던 실정임.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국가가 지원한다면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 육아휴직 사용이 촉진되고, 출산문화 확산 및 진정한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임.

- 일곱째, '육아대체인력 매칭 시스템' 신설

▷ 양육은 양육자의 직접적인 양육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간접적인 양육비용을 발생시킴. 특히, 고용주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은 규모화 영세한 업체일수록 가중됨. 이에 민간의 헤드헌팅 업체들을 활용하여 육아대체인력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육아대체인력 매칭 시스템은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고,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도 늘어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매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헤드헌터 수요가 증가하여 그 자체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고용시장에서의 수평적인 이동 증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뿌리내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여덟째, 오피스타워 보육시설 설치 강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무시간 중 육아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보육시설을 오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대기업의 경우 사업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그러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연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오피스타워에 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할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유사한 편익을 누릴 수 있음. 특히, 보육시설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자녀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됨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재고와 함께 남녀가 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우수상 ⑦

제안자	서지연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한국형 암 애프터케어		
① 제안배경	<p>○ 한국의 5년 상대 암 생존율 70.3%, 2018년 기준 한국의 암 발병인구는 243,837명 그 중 젊은층으로 분류되는 만 20세에서 49세의 암 경험자는 47,117명으로 전체 중 약 19.32% 차지</p> <p>○ 젊은 암 경험자는 남성 14,598명, 여성 32,521명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로 여성이 더 많아 ※ 전체 여성 암 발생순위 및 생존율 1위 유방암 (93.3%), 2위 갑상선암 (100%), 3위 대장암(74.3%)</p> <p>○ 여성의 암 진단은 치료와 가사노동, 임신 및 출산, 돌봄, 경제활동 등의 문제 이 중고 부담 커</p> <p>○ 한국은 업무상의 재해를 제외한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한 상병수당 및 질병 휴직, 난임 지원 제도 부재 ※ 이재명 소확행 공약 17번째, 상병수당으로 실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소확행 공약 31번째, 난임 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p> <p>○ 여성과 청년은 고용취약계층, 암·난임으로 인한 타격은 더욱 크지만, 사회적 자본과 안전망 부재</p>		
② 제안내용	<p>- 누구나 치료 이후가 걱정 없는 나라 - 암 치료 후 청년의 삶, 사회안전망 강화</p> <p>◇ 암 애프터케어 주요 공약 ◇ ○ 청년 암 경험자 난임 부부 지원 및 유전성 암 임신 관련 법안 개정 ○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직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 ○ 치료 후 원활한 복직을 위한 <가칭>리턴십 및 근무 유연제 지원 ○ 암 투병 부모의 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지정, 육아 공백 해소</p> <p>◇ 부산 공약 : 암통합케어시티, 부산 ◇ ○ 암 통합케어를 위한 도시 시스템 구축, 한국형 매기센터*영국설립 ○ 국내 최초 통합형 케어 유기적 시스템 구축 도시로 의료 관광 활성화 ○ 만 65세 미만 부모 간병을 하는 영케어러 (청년 간병인) 지원 ○ 원자력 의과학단지 내 한국형 매기센터 신축 및 메디컬 힐링 거버넌스 운영 ○ 부산시 암 발생률,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1위 관리를 위한 연구 (부울경)</p> <p>(비전) 암 치료 이후도 걱정 없는 사회, 포용적 사회 실현 ㉠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사회 핵심경제활동인구 연간 암 발생 수</p>		

<p>(5년 상대 생존율 70.3%, 2040 발생 47,117명 전체 19.27%) 한국 암 진단 후 직장복귀율 OECD 최저 (OECD 평균 63.5% → 한국 30.5%)</p> <p>㉡ 암 치료가 저출생, 육아공백·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항암 전 난자·정자 보호 및 배아 동결 난임부부 지원 대상 포함 (항암 시 동결비 및 보관비 지원 X → 동결 250~600만원, 보관비 연간 30~50만원)</p> <p>유전성 청년 암 환자의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대상 포함 (유전성 암 확진 시 → 법적 가능 대상 내 포함) 부모 암 진단 시,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 포함 (암 진단으로 치료 중인 부모 → 우선순위 법적 가능 대상 내 포함)</p> <p>㉢ 지역통합케어를 통한 효과적 사각지대 해소 및 신(新)의료관광 발굴 부울경 지역통합케어단, 한국형 매기센터 설치 (치료 외 예방·건강증진·치료 후 케어·커뮤니티 역할) 애프터케어 및 힐링도시, 의료 관광 산업 발굴 (원자력 의과학단지,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p> <p>㉣ 수도권 의료 집중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신뢰도 향상 부울경 암 치료성과 향상 및 회피가능사망률 관리 (전국 암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 회피가능사망률 1위) (서울·경기 외 전국 의료기관 수 1위)</p> <p>3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p> <p><청년 일자리> 일·치료 병행 제공 체계 확충 1. 업무상 외 질병에 관한 상병수당 보장 2. 치료 휴직 및 근무 유연제 강화 3. 기업 지원책 및 대체인력 지원 마련 4. 일·치료 병행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p> <p><여성·가족> 암 애프터케어제도 기반 강화 1. 암 환자의 일·치료병행 및 치료휴직 제도 강화 2. 암 치료 부모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3. 기존 난임 부부 지원 대상 내 암 환자 포함 4. 유전성 암 배아 및 태아 유전자 검사 시행</p> <p><부·울·경> 지역통합케어공공 기반 강화 1. 협력 및 통합 케어 지원 기반 확대 2. 치료 후 건강 증진 초점 및 환자 유인 체계 강화 3. 암 치료 성과 향상 및 연구를 통한 체계 정비</p>
--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약 이행 기대효과 ◇ ■ 이재명 후보의 취약 지지계층인 2030 여성의 지지선언 효과 및 이슈 선점 ■ 암 치료와 동시에 발생하는 청년, 여성 역할 부담 증가에 조명하고 일·치료병행, 육아 부담 등의 환경 개선 논의 ■ 국내 '암'에 대한 정부 및 사회역할 균형 제고
	[전국] ○ 청년층이 암 치료로 인해 겪는 경력단절 해소 및 가족 소득분위, 삶의 질 안정화 ○ 암 치료 부부의 난자·배아동결·<유전성 암 부모>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시스템 시행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및 치료로 인한 저출생 방지 ○ 육아공백 및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적극적 치료와 가족 삶의 질 관리
	[부산] ○ 지역통합관리를 통한 영케어러<청년간병인>가족의 경제·사회적 고립 해소 ○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료 신뢰도 향상 및 암 의료성과 관리 향상 ○ 수도권과 차별화된 부산 新의료관광 활성화 및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 ○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치료 후 케어 서비스 안정적 이용 대표사례

○ 우수상 ⑧

제안자	서정화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당뇨 환자 관리		
① 제안배경	<p>저는 호주에 사는 교포입니다. 제가 당뇨 지병이 있어 현지에 살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 국내 당뇨 카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의 당뇨 관리 부재가 너무 들어와 제안 드립니다. 천만 당뇨인 시절에 살고 있는데 정부의 관리와 대책이 너무 부실 한 거 같습니다.</p>		
② 제안내용	<p>먼저 저는 이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이곳 현지의 사정을 간략하게 전달합니다. 먼저 이곳은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정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NDSS 라고 합니다.</p> <p>일단 피검사 결과 당뇨라고 판정 받으면 이곳에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 회원증이 나옵니다. 이 회원증이 있으면 당뇨 소모품을 싸게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매일 쓰는 당뇨 스트립이 이곳에서는 한 통에 60 센트 입니다. 한국 사정을 보니 거래 되는 가격이 이곳의 일반 사람이 살 수 있는 원가에 가까운 게 안타깝네요. 단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의사와 상담하여 관리를 받아야 하고요 구입 내역도 다 NDSS 보고가 됩니다.</p> <p>절차는 의사의 요청서를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 더 혜택은 당뇨 환자는 독감 백신 무료입니다. 당뇨 환자는 회원증을 항상 소지합니다. 혹 정신을 잃고 쓰러져도 금방 알 수 있네요.</p> <p>실비 보험 가입도 문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잘 따르고 관리를 잘 하는 환자들에게는 실비 보험 가입이 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할 거 같습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당뇨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발생하는 물론 장애를 입거나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p>		

□ 모범상(22건, 19명)

○ 모범상 ①

제안자	김지현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생활소음 갈등해결 (증간소음 포함)		
① 제안배경	<p>증간소음을 포함해서 생활소음 문제가 심각함 특히 주거지 주변에 스크린 골프장, 실외 골프장, 세차장, 코인세탁소 등 생활편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과의 갈등이 빈번함</p> <p>특히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2019년 소음갈등으로 인해 이웃주민이 방화하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함</p>		
② 제안내용	<p>스크린 골프장이 집 옆에 운영되면서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지자체에 측정을 요청하였으나 기준 미달이라 함</p> <p>현재 법령으로는 1시간 측정 시 끊임없이 소음이 발생해야 하며 소음기준도 높게 설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음</p> <p>스크린골프장, 야외공사 등 대부분의 소음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아닌 즉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p> <p>소음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소음 발생업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득하도록 해야 함.</p> <p>네이버에 골프장 소음만 검색해도 지식in에 문의하는 글들이 많음</p> <p>생활소음을 위해 법령제정과 전수조사 등 주거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현재 환경부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증간소음에만 업무가 집중되고 있고 생활소음 담당부서는 지자체에서만 운영됨</p> <p>생활소음센터를 운영하여 전국의 생활소음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소음측정기준을 현실과 맞게 재조정 필요 (소음진동법 개선)</p> <p>또한 소음발생업종을 분류하여 소음발생 업종은 영업신고 시 방음공사 여부 등 허가제 필요함</p>		

○ 모범상 ②

제안자	김종목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제안명	K-Jewelry 한류상품화		
① 제안배경	<p>● 제안 배경</p> <p>주얼리 산업은 많은 고용 창출과 함께 발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p> <p>선진 유럽은 물론이고 중고를 넘어 이슬람 국가들과 공산 국가인 중국도 많은 수출과 고용 창출 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p> <p>세계 최대 주얼리 전시 개최지인 홍콩은 2016년 기준 보석 원자재 17조 원을 수입하고 보석 수출 31조 원으로 순수 17조 원의 흑자를 보았으며, 중국은 주얼리 제조로 43조 원을 수출하였습니다.</p> <p>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완성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p> <p>K-Jewelry를 한류 상품화하므로, 세계 3대 수출 강대국으로 부상한 K-Beauty산업과 함께, 지속적인 한류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p>		
② 제안내용	<p>● 제안 내용</p> <p>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그동안 주얼리를 산업으로 보지 못한 정책담당자의 무관심으로 산업기반을 갖추게 뒤따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p> <p>합성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합성 보석 또는 처리 보석이 진품 보석으로 둔갑하고 합량 미달 골드바 또는 도금한 가짜 골드바까지 불법거래 되어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p> <p>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에 불신을 가진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300% 비싼 해외 주얼리 명품 브랜드를 찾아, 코로나 사태에도 매년 30%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p> <p>이런 기이한 현상을 막고 한국 주얼리를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 최우선입니다.</p> <p>따라서 불법거래 음성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주얼리 모법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1994년까지는 고물상 허가제 속에 귀금속 소매상이 들어 있었으나 고물상 허가제가 폐지되며 귀금속 매장을 관리할 근거법이 없어 현재 90% 이상 무자료 음성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으로, 음성 무자료 거래 특징인 불법 금, 합성 보석, 처리 보석이 진품으로 둔갑될 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주얼리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p>		

	<p>1. 주얼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법 제정 K-Jewelry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구축이 절실하며, 국가 미래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을 위해 주얼리의 유통 관리와 산업기반 조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p> <p>2. 서울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 서울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므로, 많은 돈을 들여 해외 주얼리쇼를 나가 수출하지 않아도 국내 전시를 통해 기존의 홍콩에서의 주얼리 전시 업체들과 바이어들을 서울 국제 주얼리 전시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p>	<p>● 기대 효과 막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의 주얼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소비자들 사이 해외 브랜드가 아닌 국내 주얼리 구매를 촉진하여 값비싼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수입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귀금속 제품 국제 경쟁력 강화에 따른 K-Jewelry 한류 상품화로 많은 수출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 가능하고 안정적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p> <p>무자료 음성시장 양성화에 따라서 5천억 원의 세수 증대와 최소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적어도 1년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무자료 거래가 최소 10조 원이고 고용보험 미 가입 종사자가 최소 5만 명 이상 일을 하고 있음)</p> <p>K—Jewelry 상품화와 주얼리 전시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의 주얼리 거래 중심국가로 부상시켜 많은 수출로 귀중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p> <p>대한민국 주얼리 명품 브랜드를 탄생시켜 세계의 고급 주얼리의 생산기지화로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p>

○ 모범상 ③

제안자	한숙경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① 제안배경	<p>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실업계 운영위원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해하며 기술직을 하고 있다.</p> <p>평상시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술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술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 2020년 12월 EBS교육방송 실업계 특성화고에 문제점에 대해 방송이 나왔으며 다시 한 번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와 개선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p> <p>23년 소상공인으로서 실업고 채용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실습 없는 취업안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다.</p>		
② 제안내용	<p>업계는 취업이 목적이다.</p> <p>그에 따른 자격증을 따게 도움을 주지만 자격증취득도 일부학생들에 이야기이다. 실업계 학생들 대부분은 실질적 부분 사회적 현실을 학교생활 때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생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p> <p>사회초년생을 사회생활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부분과 정책적인부분이 수반되어야 한다.</p> <p>먼저 학교에서는 직업식교육 인성교육 윤리교육이 우선이다 도제학습과 일·학습 병행에 학교육중 실습비중을 높여야한다 현장실습에 원활해야 실질적 취업 시 안정된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p> <p>실업계학생 일부에 사고사와 과거 잘못된 인식으로 과도한 현장실습에 업무로 인하여 학생들에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차후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더라도 적응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p> <p>대안점으로는 현장실습교육을 학생수준에 맞추어서 실습에 시간과 범위를 조절하여 점차 실습범위를 넓혀야 취업 시 학생과 현장에 격차를 줄일 수 있다.</p> <p>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내 산업과 연계하여 3년 졸업 후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는 방도가 모색해야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내 실습기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과 선택후 기술습득에 주력해야한다.</p> <p>지역사회 연계 실습기회가 많아지고 지역 내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진출 적응을 시도하여야한다</p>		

	<p>현 교육청제도는 실업계학교 현장실습과 도제학습에 관심과 대안점에 대해 무방비이다. 교육계는 인문계에 비중을 두며 현실적으로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안타깝다.</p> <p>지방자치는 "전문고 전문대에 연구"하고 "연계학습 발전"시켜야한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 안	<p>특별교육향상을 위해 도제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국가균등에도 발전에도 영향력이 있다. 외국인 학생들 유입하여도 확대되며 중도국 자녀에게도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p> <p>인구유입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학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 기술습득과 동시에 사회적응 언어적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도제학습 일·학습병행제 지방자치는 연구해야한다.</p> <p>지역내 자활교육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지역내 자립도와 국가균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사회적응과 진출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의지를 갖고 실현시킬 것이다.</p>

○ 모범상 ④

제안자	김우성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_“국민 암행어사 포털”		
① 제안배경	<p>이재명 후보가 가로등 예산을 25% 삭감하고 정자 가격을 지적하는 영상을 접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도 멀정한 보도블록이 교체되는 것을 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복잡한 예산 열람 절차로 정보 접근의 문턱이 높아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p> <p>따라서 빅데이터 기반 통합·간편 플랫폼을 통해 예산 집행을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p>		
② 제안내용	<p>모든 국가 예산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암행어사 포털” 운영을 제안합니다.</p> <p>현재 17개 시·도, 기재부 홈페이지 등에 예산 정보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를 이용하여 내 집 앞 가로등 예산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p> <p>이를 위해선 17개 시·도의 예산 집행 빅데이터를 담은 “국민 암행어사 포털” 개발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와 GPS 연동을 통해 본인 주변의 예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준비되어야 합니다.</p> <p>지자체는 사업 내용, 책임자, 기대효과 등 더 많은 정보를 게시하며 국민의 궁금증에 대한 친절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도 일괄 업데이트하여 공약들이 얼마만큼 실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에 맞춰 국민 참여형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국민의 정치 관심도를 높이고 투명한 지자체 예산 집행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에게는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께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p> <p>문재인 정부 정책 중 “청와대 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정부가 직접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의 여론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내었습니다. “국민 암행어사 포털” 또한 5천200만 명의 국민이 직접 국가 예산을 감사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p> <p>이재명 후보는 연설에서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위해 아낄 것을 아끼며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p>		

○ 모범상 ⑤

제안자	문종진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국민 정신건강 전담 정책		
① 제안배경	<p>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 치료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체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업무, 학업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늘어가고 있으며, 자살은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p> <p>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검진에도 우울증 검사를 도입했지만 여기엔 어린이, 청소년은 제외될 뿐 아니라 검사도 10년에 한번 실시하고 우울증이 의심되면 상담안내에 그치는 등 조치도 미약합니다.</p> <p>정부가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합니다.</p>		
② 제안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전 국민의 정신과 주치의를 지정해 연 1회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합니다. 2. 국민 1명당 정신건강 주치의(전담 상담사 또는 의사)를 매칭하여 정신건강 상담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추가상담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주치의가 적극 조치합니다. 3. 곁팔기식의 상담을 피하기 위해 30분 이상의 상담시간을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단순 상담 뿐 아니라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약물치료 등 타 의학과와 연계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해 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병력 이력이 남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따른다는 고정관념에 사람들이 쉽사리 정신의학과를 방문하기 어려운데, 마음이 아프면 똑같이 병원을 가서 진료 받아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정신의학 진료의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3. 도박, 알콜 중독의 경우 본인은 중독자가 아니므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계속 중독에 빠져있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상담함으로써 중독자 대상 정기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자살, 살인, 도피 등의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 모범상 ⑥

제안자	김용선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제안명	착한 임대인 종부세 감면제도										
① 제안배경	<p>종부세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인 불만 - 종부세 급등 2. 임차인 불만 - 부동산 가격 상승및 종부세 급등이 임대료 상승초래- 임차인 주거불안- 정부에 대한 불만고조 3. 정부정책 신뢰도 저하 - 부작용 속출-법인소유주택, 상속주택, 종중주택 등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위축-임대료 상승 - 서민 주거불안, 경제총량에서 보면 임대주택 중 일정량은 민간에서 공급해야 되는데 민간 공급 불가 4. 선거에 미치는 영향 - 2주택이상 소유자230만명, 해당 임차인230만명 - 세대당 2명 예상- 총 920만명 										
② 제안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의 : 착한 임대인(임대주택 임대료를 적정가 이하로 임대하는자. 즉 주택 공시가격의 일정수준 이하로 임대하는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율을 일정부분 감면하는 제도 2. 방법 : 2-3주택 종부세율(C) = 1주택자 종부세율(A) + 종과세율(B) 인데, 착한 임대인에게는 종과세율(B)를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0-100% 감면하는 방식 <p>예: 임대료 수준-임대주택 공시가격의 ()% 일 때 종과세율(B) 감면율</p> <table border="0"> <tr> <td>80% 이하</td> <td>10% 감면</td> </tr> <tr> <td>70% 이하</td> <td>20% 감면</td> </tr> <tr> <td>60%, 50%, 40% 이하</td> <td>각각 40%, 60%, 80% 감면</td> </tr> <tr> <td>30% 이하</td> <td>100% 감면</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감면율 표는 정부에서 정함, 월세의 보증금 환산율도(예 3%, 5% 등) 정부에서 정함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을 년1회(7-8월) 또는 2회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여 임대료 확인,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는 세금계산서로 갈음*** 임대료 수준에 비해 감면율이 너무 적으면 임대인들은 감면보다는 차라리 임대료를 더 올려서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 시키려고 함으로 감면율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 3. 적용사례 ---갑 임대인 공시가격8억(거주), 공시가10억(임대-보증금5억)일 때 현재 종부세율 : 2-3주택세율2.2%(C) = 1주택세율1.2%(A) +종과세율1%(B) 현재 종부세(8억+10억) - 공제6억 = 12억 x 세율2.2% (12억 이하) 적용 착한임대인 갑 : (8억+10억) - 공제6억=12억 x 세율1.6% (A1.2%+B1% x (1-감면율60%) = 1.2% + 0.4% = 1.6%) *공시가10억일때 임대보증금5억이면 감면율60%적용되므로 종과세율이 0.4%이므로 갑의 종부세율은 1.6%가 적용됨 			80% 이하	10% 감면	70% 이하	20% 감면	60%, 50%, 40% 이하	각각 40%, 60%, 80% 감면	30% 이하	100% 감면
80% 이하	10% 감면										
70% 이하	20% 감면										
60%, 50%, 40% 이하	각각 40%, 60%, 80% 감면										
30% 이하	100% 감면										

	4. 공시가격은 합산 과세되고(현행과 동일), 세율만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 중부세 취지에 부합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1. 정책적 효과</p> <p>a. 정부 부담 완화---소득수준 낮은 일부 계층은 어쩔수 없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 민간 자본이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부분 부담한다면 정부는 이부분 투자를 줄일수있어 선순환 경제효과 있음.</p> <p>b.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증대---주택 총량으로 볼때 민간에 의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순응하는 것임.</p> <p>c. 주택 구매수요 둔화--- 전 월세 급등으로 주택구입을 서두르는 주택구매수요를 완화하여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 즉 수요는 완화하고 공급은 증대하여 주택가격 하락에 도움.</p> <p>d. 중부세 부작용 해소---중부세 급등과 법인주택, 상속주택, 종중주택 등 부작용과 국민 불만 해소가능, 특히 현행 중부세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축소시켜서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p> <p>2. 임차인 주거 안정</p> <p>3. 임대인 불만해소</p> <p>4. 선거에 미치는 효과</p> <p>a.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좋아함 960만명</p> <p>b. 정부 여당도 부담 없음</p> <p>c. 임대인, 임차인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인식 - 양극화 해소제도로 자리매김 가능</p>

○ 모범상 ⑦

제안자	김현옥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제안명	“옛장수 마을대로” 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다 처방 필요!		
① 제안배경	<p>아파트 관리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해당하는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p> <p>관리비 부과는 크게 두 종류로 공용부분의 운영비와 세대 전유부분 운영이며, 이중 일반 관리비 부분이 17개 시도별 사적 자치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호봉제 또한 의무가 아니기에 매년 근거 기준이 미약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또한 덩달아 인상되고 있기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악성 민원이 폭증하는 등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p>		
② 제안내용	<p>세종시 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9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리주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현실이다.</p> <p>특히 신도시이기에 정주환경이 우선순위가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 중이며 관리직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전문 영역인 관리직원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구인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관리소장 경력자가 타 단지로 이직을 하는 경우 5년 경력의 소장님 또한 기존 급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기준이 없으며, 관리소장 및 시설 관리직원 또한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급여 인상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p> <p>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적 개입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p> <p>둘째,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가 정착된다는 가정 하에 전국의 읍면지역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신도시의 동지역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현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게 되면 맡게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통장 수당 지출 비용을 전국적으로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공동주택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할 경우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발굴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고도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협회 산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지휘·감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p> <p>또한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 등은 공동주택의 민원 감소와 활기찬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관 협업 기능의 선진 사례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p>		

○ 모범상 ⑧

제안자	오현숙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장애인고용지원금		
① 제안배경	<p>장애인 2급입니다 지금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전 장애인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일반인 공고로 취업을 했습니다. 컴퓨터강의를 하는 직업이지만 최저임금으로 4년을 지내다가 임금을 올려달라는 건의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고용노동부에 처우에 대한 상담을 한 결과 다통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임금을 올려줬지만 아무런 처우개선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계약직의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등록증을 쫓지만 제 동의 없이 사업체측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p>		
② 제안내용	<p>장애인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이용을 하면 장애인고용한대가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요. 실상 그 장애인은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한 채로 장애인 고용노동부에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p> <p>전 그래서 제안합니다. 기업에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다 지급할 게 아니라 장애인과 고용기업과 같은 비율로 나눠주거나 아님 장애인의 처우를 같이 개선하는 대가로 주는 게 기업도 장애인도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에는 이익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되는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p> <p>최저임금을 5년간 받으면서도 일반인처럼 일을 했지만 기업은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직원에게는 아무런 의무감이나 죄책감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벌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노동부에 상담도 해봤지만 그쪽 직원들도 장애인이 아니라서인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정책을 다시 세우든지 하면 좋을 듯합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전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처럼 아무런 맘 상하고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책은 크게 세우고 나타내야 하는 게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수 약자인 장애인도 힘이 날것입니다.</p> <p>또한 기업에서 본다면 고용할 때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받을 때만 장애인을 찾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지 않을까 합니다.</p> <p>나를 위한 이재명처럼 저 작은 장애인인 저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후보님이 되어 주세요.</p>		

○ 모범상 ⑨

제안자	작은실천	제안분야	국토·자원·환경
제안명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이하 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 [가칭 청년주택리츠] 운용 방안 제언		
① 제안배경	<p><input type="checkbox"/>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임대리츠의 주택사업에 있어 소수의 민간개발자(투자자)의 과도한 수익률 추구가 사회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확보가 주된 업무인바, 공공택지 및 공공부지의 주택사업에 청년주택리츠가 참여 ○ 청년의 출자 재원으로 청년주택리츠는 분양(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익 공유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무주택청년은 주택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청년 20만명(군제대상병 포함)*5,000,000원(인당출자금)=1조원의 자본금 조달 가능하며, 3~4조원 타인자본을 통해 택지개발에 준하는 사업추진 가능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시장에서 사모투자자(금융자본)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청년자본의 부동산금융 플랫폼 토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부동산투자회사(사모방식) 모델을 통한 안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민간임대리츠 방식 적용 가능 (세부자료는 minjoo@gmail.com. 메일 전송) 		
②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좌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의 경우 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출자자 모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금전신탁계좌 모집시 청년의 자격요건 정함, 금융기관별 신탁계좌를 1인으로 계산하여 50미만의 신탁계좌를 사모방식의 모집 ○ 청년의 종자돈(주거지원금, 청년계좌적금, 군장병적금 등) ⇒ 특정금전신탁계좌 ⇒ 부동산투자회사(청년주택리츠) 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운용은 채권 20% 이내, 청년주택리츠 80% 이상 구성 제안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투자회사 『청년주택리츠』 출자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미참여) 특정금전신탁과 주택도시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금전신탁(무의결권 우선주), 주택도시기금(보통주)로 구성, 투자수익 배분은 우선주와 보통주 동일 ○ (지방공기업 참여) 상기 출자자와 지방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금전신탁(무의결권 우선주), 주택도시기금(의결권 우선주), 지방공기업(보통주) * 지방공기업의 경우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자로 현물출자 가능 		

	<p>□ 주택사업 포트폴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리츠별 수도권, 지방의 5~6개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 기여, 분산투자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과 준공시기가 유사한 주택사업을 청년주택리츠 사업장으로 구성하여 4년~5년 이후 출자자 배당가능하도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청년주택리츠 1호: 경기2, 인천1, 부산1, 대구1, 광주1개 사업장 구성 ○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개발지구내 5~6개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기여, 지역내 무주택자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청년주택리츠2호(인천도공): 인천검암지구 2개, 미단시티 3개 사업장 <p>□ 공공택지 및 공공부지 우선 매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화 필요) LH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택지(도시개발)의 민간 매각부지를 청년주택리츠에 우선 매각가능토록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관련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조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 제14조(토지 등의 우선공급) 참조 가능 ○ (부지 공급가) 지침상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택지공급 가격은 조성원가 80% 이내, 분양주택은 감정가로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택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자는 민간매각으로 사업수지를 조절하고 있는바, 분양주택 매각가(감정가) 적용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리츠에 조성원가 이하의 매각가 적용시 택지사업 수지구조 약화
<p>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랫폼 제공) 주택청약통장과 더불어 주택마련의 중자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적 부동산금융 플랫폼 제공 ○ (공공재인 토지의 공적 활용) 민간매각 부지를 재정(기금)과 청년의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부지를 택지·도시개발에서 민간택지로 무한 확장 가능

○ 모범상 ⑩

제안자	김성수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① 제안배경	<p>■ 제안 배경</p> <p>날로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범죄(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지마 살인 등)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또한 1인 여성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p> <p>※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4만 7천 건 발생, 가정폭력 25만 건 발생 구속 2천명 2019년 한해에 애인 또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만 97명, 살해 미수 여성 228명 (국회 2021년 행안위 국감자료)</p> <p>2004년 유명철 연쇄살인 사건, 2008년 조두순 나영이 성폭행 사건 이후 다양한 제품(여성귀가 안심이 앱,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이 출시되었으나, 사용상 불편함과 잦은 기기 오작동(80%)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실효성이 없음</p> <p>지난해 애플, 삼성, 구글, MS 등 세계 굴지의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비상호출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도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함. (첨부 위급상황 알아듣지 못하는 인공지능)</p>		
② 제안내용	<p>■ 제안 내용</p> <p>국민 대다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함으로써 위급시 손쉽게 안전하게 구조요청 이 가능합니다.</p> <p>특히 스마트폰 후면에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을 장치함으로써 스마트폰 전원 이 꺼져 있거나, 잠금이 잠겨있거나 ,GPS기능 이 차단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비상버튼만 길게(2초 이상)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 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와 위치가 전송됩니다.</p> <p>또한, 터치에러 및 기기 오작동 99%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가족을 납치 했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지마 살인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70~80% 사전예방 ○ 긴급 또는 응급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사회적 손실 절감 ○ 터치 에러 및 기기 오작동(99%) 없이 안전하게 구조요청 ○ 보이스피싱 예방 ○ 전자발찌 착용자 50~100m 접근 시 신변보호 여성에게 주의 문자 발송 ○ 1인 여성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 <p>■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구조 시스템 구성도 		

○ 모범상 ①

제안자	오희주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① 제안배경	<p>저는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사실 특성화고를 다닐 때만 해도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졸업 후 문제였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특성화고 를 위한 공약과 많은 지원으로 특성화고 출신도 그만큼 사회에서 발 전가능성이 있었고 특성화고도 튼튼한 학교라는 것이 외부에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는 일반고에 비해 정책은 없고 정책이 없으니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 원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p> <p>그리고 학생들이 취업을 나갔다가 죽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보 여지는 이런 사건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특성화고 출신들이 사회 에 나가서 더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에게 특 성화고 고졸 출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p>		
② 제안내용	<p>1. 특성화고 취업을 홍보 폐지 모든 학교마다 성적이나 다른 부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특성화고는 취업으로 학교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곧 선생님들의 실적전쟁 이 되고 높은 실적만을 위해 자연스레 학생들은 튼튼하고 좋은 회사로의 취업이 아 닌 취업률을 올리기만을 위한 콜센터, 튼튼하지 않은 중소기업, 생산직 등 아무곳에 나 취업을 시키는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의 결과는 멀지 않은 미래에 취업 한 회사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높은 취업률과 좋은 곳에 취업 한 5%의 학생들의 취업처로만 홍보를 하고 나머지 95% 친구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p> <p>그래서 그 점이 안타까웠던 저는 특성화고의 홍보를 취업률이라는 숫자로 하는 것 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란 당장 한 명의 학생의 미래가 정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취업률이라는 숫자라는 짐에서 벗어나 게 되면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취업처를 소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는 조금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과 첫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있기 때문입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기대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들의 부담 해소 2. 학생들에게 질 좋은 취업처 추천가능 3. 신입생들에게 확실한 정보전달 가능 4. 졸업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음 5. 특성화고 출신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정책 		

○ 모범상 ②

제안자	mjh(익명)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① 제안배경	<p>2020년 통계로 장애인 등록현황 683만명 정도 전체 인구대비 5.1% 신체적 장애 로 거동이불편한 장애인이 외부 활동시 가 지자체별로 다원화 되어 있어 자유로 운 외출이 불가능함</p>		
② 제안내용	<p>신체적 장애로 거동이불편한 장애인이 외부 활동 시 각 지자체별로 다원화 되어 있는 지원센터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일원화해서 시행하면 장애인들이 전국 어디서 나 자유롭게 이동 할수 있음. 현재는 각지자체별로 시행하여 활동 제약이 많음</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들의 경제적 자립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음</p>		

○ 모범상 ⑬

제안자	김상록	제안분야	정치·외교·통일·안보
제안명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제2의 개성공단)		
①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으로 북에는 배후도시를 강원북부, 경기북부에는 공단을 조성하여, 한반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교류 활성화 및 경제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됨. 		
②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의 기술력, 자본등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제2의 개성공단 프로젝트 동부, 중부, 서부 (경기북부-파주 등, 강원북부-철원, 고성 등 각 수천만평규모) 거점으로 나누어 휴전선 남한에는 공단을 조성하고, 10분~20분 거리의 휴전선 북한에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수백만평규모)를 조성하며, 남과 북 등 과서로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을 컨베이어 벨트화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반도 중앙에 거대한 대규모 세 곳의 산업 단지화 배후도시 세 곳을 조성한다. 동부에는 조선 및 동해안 항만 물류 거점 공단을 조성하고, 중부에는 생활필수품 제조 공단 조성, 서부에는 첨단 산업 및 서해, 중국 항만 물류 거점 공단을 조성한다. 각 거점 공단과 북의 배후도시를 남북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각 거점 공단 간 각 배후 도시간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을 돌아오게 하여 남한의 숙련된 고급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쪽의 인력이 제품 생산에 주력하여 간접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향후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됨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쪽의 공단건설, 북쪽의 상주인력을 위한 아파트 등 배후 도시 건설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 북한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경제교류로 경제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국 복귀 유도로 자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향후 동으로는 일본, 러시아 등 서로는 중국, 동남아등 외국기업 유치 가능함 남쪽에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자국의 기술 및 기업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경기북부 강원북부 등 남북 경계지역으로 그동안 낙후되고 발전하지 못한 곳들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거점별 특성화된 공단 조성으로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각 거점 공단별 교통망을 구축해 동서 해안을 통한 진출이 가능하다 장기적 국가 계획으로 미래 후손을 위한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동해안에 조선소나 제철소와 같은 산업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서해안에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중부에는 의료산업공단 등 통일한반도 중앙 거점 공단으로 조성하여 미래 통일 한반도에 대비할 수 있다. 		

○ 모범상 ⑭

제안자	김성광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제안명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		
① 제안배경	<p>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생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등이 확산되는 시점에 다가올 미래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콘텐츠 역량을 제고하고 인력양성, 기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 있음</p> <p>또한 ESG등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도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측면의 복지를 대한민국이 앞서 확산할 필요 있음</p>		
②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실감콘텐츠 기반 기술 융합 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실감콘텐츠 제작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부족으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킬러콘텐츠 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실감콘텐츠 산업분야의 신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생태계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연구기관-대학기관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기술 및 기법 개발 지원 - 중소기업 중심 실감콘텐츠 개발 기술 활용을 통한 상용화 및 제작 기반 조성 <p><input type="checkbox"/> 지역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용 실감콘텐츠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 등에서도 지역 콘텐츠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지역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사업 추진 ○ 지역역량을 보다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일관된 방향성, 기술 및 서비스 호환성을 기반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실감콘텐츠 생산과 서비스를 통한 실감콘텐츠 육성 필요 ○ 지역 실감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기반 사업 마련으로 지역 실감콘텐츠 기업과 인력 역량 강화 추진 <p><input type="checkbox"/> 실감콘텐츠 해외 권역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해외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스타트업 10개 중 7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진출 희망 지역으로 동남아(29.3%), 미국(22.9%), 중국(20.7%)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시장의 소비 수준을 감안하여 지역 국민들이 소구할 수 있는 현지화된 IP 또는 글로벌 IP 기반으로 한 콘텐츠 유통 지원과 산업과 연계한 융합 실감분야 진출 모색 - 북미 시장은 콘솔 중심의 시장으로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 분야의 실감 시뮬레이션의 원천기술 또한 발달,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시장 공략 - 동북아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퀄리티가 우선이며, 중국과 일본에 대응 		

	<p>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차별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콘텐츠 공유플랫폼을 통한 융합콘텐츠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콘텐츠 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지역이나 개별 대학 차원의 효과적인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한계 ○ 현장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프로그램도 단기교육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총 배출인력 450명 중 30명이 1주 교육 수료 ○ 각 지역 인프라의 상호 공유 및 전국의 실감콘텐츠 전문가 협력 활용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실감콘텐츠 활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약 95%가 장기간 휴관 또는 개별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비스만 개방하는 등 장애 인복지의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운동 실시율은 49.4%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함. ○ 감염병 예방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지원시설에서 시행하는 기존 대면 중심의 집단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비대면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필요.
<p>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p>	<p>1. 대한민국의 실감형콘텐츠 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을 대량 양성하고, 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도 K-콘텐츠가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기여 <p>2.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에 요구되는 ESG의 가치 함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도서지역,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에도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기업에게 요구되는 ESG가치도 달성 가능. * 기업과 산업계 활성화와 국민에게 체감되는 문화복지라는 두마리 목표를 동시 달성 가능

○ 모범상 ⑮

제안자	작은실천(의명)	제안분야	국토·자원·환경
정책제안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제한		
①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단계)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국공유지 및 택지를 매각하고, 그 부지에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는 모순된 매입사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심내 매입사업(다세대, 다가구, 단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운영) 임대수요에 충족하지 못한 주택매입에 따른 공실 발생 ○ (매각단계) 법령상 기준에 준하는 주택 매입이후, 노후화 및 정비사업 등에 따른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매입사업자(임차인)은 재개발 및 재건축에 의한 주택공급 및 자본이득 창출 기회 상실 □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임차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매입 ⇒ 임대차, 전세 ⇒ 전대차로 구조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택마련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임 □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지구(예정) 내의 주택을 적극 매입하여, 공공사업자의 양질의 주택공급 및 자본이득 창출과 임차인의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방안을 공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자) 매입 ⇒ 임대운영 ⇒ 재건축·재개발 ⇒ 양질적 주택 공급 ○ (임차인) 임차 ⇒ 정비사업 기간 한시적 퇴거(철거, 공사기간) ⇒ 준공시 주택보유 (공공사업자와 지분적립 또는 이익공유제도) (세부자료는 minjoo@gmail.com. 메일 전송) 		
②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법』 매입임대주택 대상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대상 포함) 주택공급이 부족한 대도심의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내 노후주택 매입, 신규 공공주택 공급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존 15년 이하 공동주택 매입사업과 병행 추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물건 매입대상 포함)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로 취득한 주택 매입대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아닌 공공사업자에게 매각 ⇒ 임대 운영함으로써 공 		

	<p>공기관 유지·관리비용 절감, 공공자산 효율적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공사 매각대상 물건 매입대상 포함)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광역권 소재의 국공유·공공기관 매각주택을 공공사업자가 일괄 매입 *자산관리공사는 재산평가, 선순위 등 권리말소 ⇒ 공공사업자 매입 ○ (매입임대주택 매입가 기준 탄력 적용)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시표 등을 연계한 수도권 매입가기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자의 매입임대 사업은 국가 재정(기금)을 지원받고 있어, 기금지원 기준과 연동하여 개선 필요하나, - 정비구역 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입가격기준 탄력적 적용 <p>㉒ 『임차인 모집 절차 개선』 기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p> <p>[참조] 주택 매입공고에 의하면 기준 임차인이 없는 주택을 우선 매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모집절차) 주택매입후 ⇒ 유형별 입주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공실이거나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을 매입이후, 유형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 기준 임차인의 거주권을 고려하지 않음 ○ (개선안) 임차인 거주 주택매입 ⇒ 임차인을 유형별 입주자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리 인정
<p>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택 매입함으로 질적·양적 승준 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건설 가용부지 부족에 대한 대안적 공급 가능 ○ (임차인 주거사다리 실현) 무주택 임차인의 등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금융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 부여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조력자 역할) 공공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일원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순기능 작동

○ 모범상 ⑬

제안자	양미아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① 제안배경	<p>우리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자리잡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민주주의와 달리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개념도 자리 잡히지 않은 미숙한 단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4-5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청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성인 및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p> <p>그러나 '민주' 라는 어휘가 정치와 밀착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킨다는 오해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이는 몇 년 뒤 지역적, 세대적 격차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념적이고 이론적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교육이 일상에서 실천되고 민주주의적 문화와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오히려 학교와 가정에서 교과서로 배운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만성적 불신만 키워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p> <p>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목적대로 공동체에 기여하며 개인의 삶이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좀 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신부터 지면하고 개선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 교육이 특정 지역과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학교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특히 학교에서는 의무화 되어야 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과 양극단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p>		
② 제안내용	<p>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검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의무화</p> <p>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우리사회가 일상의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학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에게 체감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개인별로 일상에서 자신이 민주주의 시민으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하는 검사지를 통해 측정해 보고 자신이 잘 하고 있을 경우 더욱 주위에 권장하고 예상과 달리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교육을 통해 도와주어야 한다.</p> <p>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지수'는 관념적 희망적 질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역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p> <p>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객관적 대상을 통한 나를 관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검사"의 목적이다. 나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민주 시민이며 이를 통해 태도를 개선시켜 나가며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p>		

	<p>현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에게 전달되는 내용과 방식은 강의식으로 어른들에게 시민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학생 역시 친구와 타인에게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속해있는 공동체와 관계하는 구성원 안에서 힘의 서열이 발생하고 이에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 선배에게 운동을 내줘야 하지만 2학년 3학년에게 다시 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중1은 또 집에서 동생들에게 꼭 힘센 어른들만 학생과 자녀에게 일방적인 비민주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p> <p>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태도를 관찰해 보면 상황에 따라 비민주적 시민으로서 행위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세대, 한 계층을 일상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집단으로 규정짓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성찰할 기회와 수치화 된 현재의 모습을 자각하도록 돕고 그 문제와 태도를 서로 토론하고 더 좋은 개선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수업시간과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면 현행 관념적 민주시민교육보다 일상의 민주시민 양성의 실천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p>
③	<p>기대효과 및 활용방안</p> <p>1) 자신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 2) 개선방법 모색 3) 일상에서 실천</p> <p>가장 변화가 느리고 서열화로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학교에서부터 남과 사회를 탓하기보다 나를 직면하고 구체적 민주주의 실천방법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찾고 합의에 이르는 기회를 가져보는 시간 그 과정 자체가 최고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이다.</p> <p>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도 쉽게 붕괴된다고 했다. 내신에 반영하기 위한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 자신이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학생들이 주축이 된 곧 미래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일상의 민주주의 발현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p>

○ 모범상 ⑰

제안분야	작은실천(의명)	제안분야	국토·자원·환경
제안명	민간사업자 주택개발사업의 유무상 양여하는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① 제안배경	<p><input type="checkbox"/>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p> <p>○ 수도권의 택지개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용 가용부지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p> <p>○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나 조합은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개발이익의 형량을 비교하게 되어 정책의 추진동력이 반감됨</p>		
② 제안내용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택법 법제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조건부 매각」만 가능</p> <p>○ (국공유지 양여·매각 조건 신설) 주택법 제30조에 의거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공유지 비율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적용률* 도입</p> <p>* 공급적용률: (국공유지면적 / 사업부지면적)*100%, 다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적용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50% 까지 탄력적용 가능</p> <p>- 예) 국공유지 비율이 15%, 공급적용률 100%, 건축용적률 250%인 경우 ⇒ 용적률 37.5%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공급가능 (15세대/100세대 기준)</p> <p>○ (지자체, LH등 지방공기업 매입) 주택법 제54조에 국공유지 비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주택 지자체·공공사업자 인수 조문 신설</p> <p>- 세부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함</p> <p>* 인수금액은 토지대금은 국공유지 매각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또는 제55조 준용 가능</p> <p>○ (용적률 인센티브 준용)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제3항* 준용하여 공공주택 공급면적 비율에 준하여 용적률 완화</p> <p>*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시 용적률 120%까지 완화</p> <p>○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및 매각대금) 국공유지 관리청이 준공시 사업주체에 이전, 매각대금은 공공사업자 분양대금으로 지급</p> <p>- 약정* 당사자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공공사업자의 분양대금과 국공유지 매각대금 관리 가능</p> <p>* 관리청, 공공사업자, 사업주체간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약정 체결</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동산정책) 법에 의한 공공주택 순증 효과 발생, 국공유지 보유에 따른 증장기적 주택정책 조율 가능, 재건축시 정책 수단 ⇒ 既부동산대책(공공주택 3080+_'21.2.4) 더불어 공급 확대 효과 발휘 ○ (임차인) 양질의 공공주택 임차 가능
----------------------------------	--

○ 모범상 ⑧

제안자	양미아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초·중 새 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① 제안배경	<p>매년 친구와 담임이 바뀌기 때문에 새학년 증후군으로 불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역시 불안해진다. 또 성적에 대한 압박, 왕따, 학교폭력 등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지 오래다.</p> <p>이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학습적 능력으로 친구와 학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아이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새 학년을 레크리에이션으로 학교생활이 재밌게 시작되면 유연한 몸과 마음으로 새 학년 긴장감 감소, 상호 배려하는 교우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p>		
② 제안내용	<p>학년 말이 되면 교과진도가 끝나 영화를 보거나 자습하며 수업일수를 채우는 관례가 여전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학년 초 3월에 교과진도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성격분석검사(MBTI, TCI기질검사, 애니어그램 등) 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길 바란다.</p> <p>유연한 사고와 관계형성을 위해 연중, 연말에 하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과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도 3월에 미리 시행(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등)</p> <p>연말 남은 시간에 영화만 보여주는 활동 대신 새 학년 초기 교육과정을 <관계형성기간> 을 의무화 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되는 일부 교육과정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일부 교육과정을 개정하길 바란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년 초 불안감에서 시작된 긴장 및 스트레스로 파생된 학교와 사회적 문제 감소 2. 즐거운 학교생활로 학년을 시작하여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우관계 형성 3. 다양한 성격검사를 통한 다름을 존중하고 관계를 시작하기에 교내 관계악화로 발생하는 문제들 완화 4. 학년 말 몰아서 실시하는 영화감상을 비롯한 예체능이나, 체육대회,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외부강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의 높은 교육적 효과 발현 		

○ 모범상 ⑩

제안자	최정규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정책제안명	355만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 비전 공약		
① 제안배경	<p>얼마 전 이재명대선후보께서는 TV에서 '중소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10여년 직장생활과 경영지도사로서 근 20년간 활동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연구한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p> <p>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355만개이지만, 수출기업 수는 10만개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을 제안 드립니다.</p>		
② 제안내용	<p>355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높이고 한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해외시장 천리안'을 구축하여,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축적·제공·활용해야 합니다.</p> <p>1. 해외현지 정보수집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민간·정부 여러 기관에서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너무 거시적이거나 판매지향적인 정보들이고, 해외현지 고객가치 창조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천정보에 대해서 '맹인모상'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초보 수출기업의 1년 생존율 51%, 2년 생존율 41%, 3년 생존율 35%로 해를 거듭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수출기업 수가 10만에도 못 미쳐 2.7%에 지나지 않습니다.</p> <p>2.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 한국경제의 내수시장은 좁으므로, 355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천리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청년 글로벌 마케터 10만 명 교육·훈련, 글로벌 마케터에 의한 해외현지 시장조사·연구, 조사·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플랫폼 구축과 촉진·진흥, 실물 수입 상품·전시, 해외현지 차별적 고객 가치·창안, 개발 신제품 수출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1. 기대효과 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천리안을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 맹인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크며, 정보자원을 활용해 창조적인 R&D나 마케팅 활동을 현지화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부가 해외현지 원천정보 약자인 사용자들에게 수출 기업화에 밝은 희망·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 한국경제는 국부(國富) 창출의 진정한 원천정보 자원을 확보·활용할 수 있습니다.</p>		

<p>라. 한국경제의 수출 중소기업 비중 2.7%를 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은 11%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면,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 수는 9.7만개에서 4배 증가한 38.8만개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수출 중소기업 수가 4배로 증가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955억불에서 3,820억불, 고용자 수는 955천명에서 3,820천명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p>2. 활용방안 가. 공약 : 355만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시장 천리안을 만들겠습니다. 나. 기타 : 공약, 각종 연설, 선전물에 활용</p> <p>* 본 제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는 본인의 저서를 통해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 바랍니다. www.inconconsulting.co.kr/gmi.pdf</p>
--

○ 모범상 ㉔

제안자	정재현	제안분야	사회·교육·행정
제안명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① 제안배경	<p>대학생 식당 알바의 출발은 보건증입니다. 보육교사도 매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p> <p>코로나 확산 전까지 보건증 발급 비용은 3천 원이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2021년 초부터 보건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보건증을 전국의 청년 취업에 꼭 필요한 의무사항입니다.</p>		
② 제안내용	<p>정부가 지자체는 선별검사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힙니다. 현재 부천의 경우 7개 병원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본다. 1만5천 원을 받습니다.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청년이나 자영업자 등 가뜰이나 작아진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면 빨리 해결해 줘야 합니다.</p> <p>신규 보건증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는 1만2천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의 상황인 점을 감안해 3천 원 외의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해주는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막대한 재난 때문에 발생한 생kin 일이니 재난안전기금에서라도 처리해서 보건증을 무상 발급해야 합니다.</p> <p>이미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등은 무상보건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첫 알바를 시작하는 청년에게, 보육교사에게 정부가 작은 선물을 줘야 합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부천시가 발급한 보건증은 모두 4만2천308장입니다. 80만 시민 중 5% 정도가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 받습니다. 여기에 갱신하는 비율까지 합하면 1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4천만 국민으로 가정하면 400만 명에게 칭송 받는 정책이 탄생합니다.</p> <p>보통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 등이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 받아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해결한다면 청년과 자영업자에게 완전 호평을 받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p>		

○ 모범상 ㉕

제안자	최석기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정책제안명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공약		
① 제안배경	<p>관광업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만큼 중요하고 종사자수가 많은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그 비중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입니다.</p> <p>현재 협동조합기본법 하에 농업, 수산업, 신용협동조합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관광업협동조합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지역관광업협동조합은 태동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하여 국가의 지원 하에 성장시켜 관광사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p>		
② 제안내용	<p>이에 정부가 관광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일정기금을 출연하여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 각 지역별로 관광업종사 개인, 자영업자와 기업이 협동하여 각 지역별도 민간스스로 지역관광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합니다.</p> <p>정부가 설립한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 지역 단위관광협동조합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콘텐츠를 육성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지역의 관광자원의 운영과 수익창출로 지역단위별 관광협동조합이 자립하여 가도록 합니다.</p> <p>최종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같이 민간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로 운영되도록 합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관광업의 종사자와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관광업협동조합법제정과 중앙회설립지원은 관광업이 국내경기, 특히 지방의 경기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산업분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K-한류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종식 시 외국인인 한국관광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p> <p>관광업과 관련기업의 종사자가 매우 많기에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과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지원을 이재명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할 경우 많은 득표가 기대됩니다. 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p>		

○ 모범상 ㉔

제안자	박주원	제안분야	경제·산업·고용
제안명	동일 분야 동일 NCS		
① 제안배경	<p>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많은 청년이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야의 공공기관이라도 각 기관의 NCS 과목이 달라 청년들이 적응하기 어렵고 구직 기간이 길어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p> <p>따라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청년의 부담 해소와 구직 기간 단축을 위해 같은 분야의 공공기관은 같은 NCS 과목을 출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p>		
② 제안내용	<p>NCS는 기본 과목인 직업기초능력과 전문 과목인 직무수행능력으로 나뉩니다. 발전, 환경,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분야 내에서 같은 직무는 같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과목을 출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분야에서 직무 차이로 불가피하게 과목을 달리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직업기초능력은 같되 전문 과목인 직무수행능력만 다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p> <p>이를 통해 과목의 통일성과 각 기관의 전문성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p>NCS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설문을 통해 분야별 공공기관 입사자들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NCS 과목을 파악합니다. 그다음, 파악한 내용과 분야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NCS 과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직무수행능력 과목 중 각 기관의 직무 차이로 맞지 않는 과목은 기관의 재량으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나온 NCS 과목에 대해 청년 구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해 확정합니다.</p>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p>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p> <p>첫째, 구직 기간 단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NCS 과목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되기에 구직 기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같은 분야의 기관에 지원하면서 수많은 과목을 공부하는 일이 없어져 취업 준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NCS 제도의 신뢰성 향상입니다. 분야별로 NCS 과목을 조정하면서 NCS의 실효성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p> <p>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첫째, 구직자 지원 제도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NCS 과목을 정하면서 분야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구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 지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학협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과목과 역량이 정해지면서 학교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분야별로 적합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p>		

부록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특별포상 대상자 명단

① 특별포상 대상자 현황

- 공모 결과 : 총 372건(응모인원 291명, 동일인 복수 제출)
- 심사 절차 : 1차 전문가심사 및 2차 국민심사

구분	포상 규모
당대표 1급 포상(최우수상, 상금 각 50만원)	2명
당대표 2급 포상(우수상, 상금 각 30만원)	8명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모범상, 상금 각 20만원)	17명(18건)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장려상, 상금 각 10만원)	59명(64건)
특별포상 총 규모	86명(92건)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모범상 이상 우수작 수상 대상자 29명(32건) 중 실제 수상자는 27명(28건), 장려상 수상 대상자 61명(66건) 중 실제 수상자는 59명(64건)임)

② 당대표 1급 포상(최우수상) 2명

구분	연번	성명	공적사항	비고
당대표 1급 포상 (최우수상)	1	나광국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위(1,331 / 13,236)	당원
	2	신희근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위(1,097 / 13,236)	당원

③ 당대표 2급 포상(우수상) 8명

구분	연번	성명	공적사항	비고
당대표 2급 포상 (우수상)	1	정정호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3위(798 / 13,236)	당원
	2	최용휘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4위(773 / 13,236)	당원

3	임병현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5위(701 / 13,236)	당원
4	이수경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6위(532 / 13,236)	당원
5	황경석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7위(527 / 13,236)	당원
6	임승주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8위(526 / 13,236)	당원
7	서지연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9위(525 / 13,236)	당원
8	서정화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0위(513 / 13,236)	비당원

④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모범상) 17명

구분	연번	성명	공적사항	비고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 (모범상)	1	김지현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1위(468 / 13,236)	당원
	2	김종목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2위(438 / 13,236)	비당원
	3	한숙경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3위(437 / 13,236)	당원
	4	김우성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4위(427 / 13,236)	당원
	5	문종진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5위(383 / 13,236)	비당원
	6	김용선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6위(370 / 13,236)	비당원

구분	연번	성명	공적사항	비고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 (모범상)	7	김현옥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7위(342 / 13,236)	당원
	8	오현숙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18위(337 / 13,236)	비당원
	9	김성수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0위(310 / 13,236)	당원
	10	오희주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1위(300 / 13,236)	당원
	11	김상록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3위(243 / 13,236)	당원
	12	김성광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4위(207 / 13,236)	비당원
	13	양미아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6위(174 / 13,236) -2차 국민투표 28위(146 / 13,236)	당원 2건 당선
	14	최정규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29위(118 / 13,236)	비당원
	15	정재현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30위(106 / 13,236)	당원
	16	최석기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31위(77 / 13,236)	당원
	17	박주원	-우수 정책제안 -1차 전문가심사 76.20점 이상 -2차 국민투표 32위(71 / 13,236)	비당원

⑤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장려상) 59명

구분	연번	성명	공적사항	비고
민주연구원장 2급 포상 (장려상)	1	강재구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2	권영록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3	김가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4	김동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5	김명수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6	김성근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7	김성열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8	김수래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장려상 2건)
	9	김영수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10	김종덕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1	김혜은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2	나광국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3	나영준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4	류창환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15	류태림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6	문찬우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7	박계연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8	박동원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19	박상운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20	박상인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1	박성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2	박정우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3	박종주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4	박중규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25	박한수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26	박형구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7	배향선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8	송만영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29	안기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30	양동선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31	오광영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32	옥승용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33	유명옥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구분	연번	성명	공적사항	비고
	34	유민철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35	윤구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36	이순자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37	이원모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38	인태원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39	임승주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장려상 2건)
	40	장준영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41	정다혜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42	정윤서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43	정재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장려상 2건)
	44	조광순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45	조병성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46	조성현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47	조연우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장려상 2건)
	48	조영만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49	조종걸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장려상 2건)
	50	주미옥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1	지도영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2	최성룡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53	최승열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4	최용식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5	최경호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6	추병수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비당원
	57	한숙경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8	홍승호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
	59	황효빈	-1차 전문가심사 71.80점 이상	당원